

특별기고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정부가 해결을

그렇다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등 교수'인가? 우수한 교수들을 우대하고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계약임용제 개선,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등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비정년트랙의 문제는 그 출발 시점이 정부, 대학, 교원의 단기적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비정년 전임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조직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허술한 계약임용제 개선해야

신임 교육부 장관은 계약임용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비정년트랙'을 폐기하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2018.8.30)가 판시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대학 경영진들의 대학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이 제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평가 지표에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켜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비정년교원을 대학사회에 양산하고 있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즉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이런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 의무 불이행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원 자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한 법령으로 임용된 교원이다. "대학에서 학내교육, 활동 범위 등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이다. 즉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원에게 요구되는 연구와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서 두 집단이 비슷한 학력, 기술 등을 가지고 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보수 지원 없어

최근 5년간 대학에서 임용한 신입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일반대 21.5%, 전문대 18.4% 등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은 더 팽팽해졌다. 이는 교원 신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비정년트랙을 낳은 '계약임용제' 및 '저임금·단기계약' 제도가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끓어 터진 심각한 차별을 키워왔기 때문에 일선 유능한 교수들이 스스로 강단을 떠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대학의 공공성과 교원 신분의 안정화를 기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OECD 평균인 1.1%로 늘려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 급여 등 처우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서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고



김난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공학박사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관측 강화 절실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우리 광주는 2020년 8월에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광주형 뉴딜의 비전과 정책방향의 하나로 AI(인공지능)-그린뉴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표방하였고, 이를 위해 추진 3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수립했다.

이런 목표나 추진 전략 및 과제들은 추진과정 중에 수차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핵심사항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관측에 기반한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관측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온실가스관측망 확대 및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600여 개가 넘는 대기환경측정소를 설치하여 국가적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관측하고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대기환경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에 대한 관측은 2011년 강원도에 설치된 지구대기측정소 1곳에서만 수행하고 있어 국내 온실가스 농도의 정확한 파악과 앞으로 변화추세 분석을 위한 배출통계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대기환경측정망과 연계해 주요 온실가스 농도 관측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짧은 기간 내 온실가스관측망 확대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관리 측정

망은 국제 규제대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종을 모두 관측하고, 지자체 관리 측정망에서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지상측정망 자료는 위성관측 자료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나 검증,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이행효과 확인 및 정책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측자료와 교차 검토됨으로써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중요한 증빙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은 관내 13개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6항목을 상시 측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대기질을 365일 관측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비상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기환경측정망에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관측시스템이 연계된다면 앞으로 30년간의 탄소중립 대장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나침반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온실가스 측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후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극복방안의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까지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가나 지역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특지광장

지난 5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한 승합차량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었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231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속적인 법규 개정과 홍보 등의 관리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고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

도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만큼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

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가져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김창희 공성경찰서 경무계장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상업·문화시설 갈등 외면 말아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하기 전 새롭게 브랜드화한 '듣는다 우체통'에 시민 민원과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듣는다 우체통' 플랫폼은 '바로 소통 광주'의 후신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 지금까지 100여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들이 안전과 교통 관련이 40여건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관광·문화·예술·건강 분야 관련 글이 수십 건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글도 다수 있었다. 특히 시민들은 복합쇼핑몰 유치와 놀이공원, 공연장 등 상업·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복합쇼핑몰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이슈로 떠오른 현안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광주시민 일부는 타 지역으로 원정쇼핑을 다닌다. 이 무슨 기괴한 일인가. 타 광역도시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상업·문화시설이 부족한 광주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다. 만일 '바로 소통 광주' 또는 '듣는다 우체통' 같은 온라인 민원 플랫폼이 없었다면 다수의 시민은 침묵하거나 병어리 냉가슴을 앓았을지도 모른다.

광주지역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동네상권,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식자재마트 같은 시설의 우후죽순적 설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복합쇼핑몰과 소상공인 상생의 방안을 행정 당국이 모색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광주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면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재유행 대비하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름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변이종의 출현은 물론 휴가철을 맞아 늘어나는 인구 이동이 유행 확산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여름을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본다.

광주·전남지역도 확진자가 다소 늘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일 광주 188명, 전남 248명 등 모두 436명이 확진됐다. 주말이면 확진자가 줄었던 흐름과 달리 광주 164명, 전남 243명 등 407명을 기록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9명, 전남 1만715명에 이어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달 10일 이후 1만명 밀을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달 29일 다시 1만명 위로 올라갔다.

감염재생산지수 흐름도 심상치 않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역제를 의미

한다. 6월 4주까지 13주 연속으로 1 미만을 유지하던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달 28일 1.0으로 올랐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높은 백신 접종률(2차접종률 87%)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7월 7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번졌다.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이었다. 올해는 높은 수준의 면역이 형성됐다가 그 수준이 낮아져 유행이 재발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로 인해 재감염자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의료전문가들은 현재 재유행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여름이 코로나19 재유행 기점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당국의 빈틈없는 방역체계 고동, 그리고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바짝 긴장할 때다.

공·폐가 정비사업 방안 시급하다

기지수첩



민찬기

사회부 기자

동구의 폐가촌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도시 미관 훼손,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동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폐가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폐가 정비사업은 지자체에서 버려진 공·폐가들을 뒷밭이나 공공주차장 등 공공부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정비한 공·폐가는 전체 404개소 중 28개소, 약 7% 수준이다. 이마저도 일부는 울타리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진행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공·폐가들은 각종 범죄 위험 노출과 안전사고 등 문제 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위험 요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돼 왔다.

현재 공·폐가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했고, 담장엔 군데군데 깨지고 금이 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통제 없이 주의 스티커 한 장만 붙여 있는 곳이 태반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가 두 번이나 발생한 광주에서 나오기엔 적절하지 못한 대처다.

도로 주변이 아닌 골목 속 줄지어 있는 폐가들은 노후화돼 자칫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각하다.

담당 부서는 골목 폐가촌의 경우 장바구니 들어갈 수 없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집 주인이 쉽게 내놓지 않아 골목 전체를 정비하기 어렵다는 궤변만 내 놓고 있다. 공영주차장과 뒷밭 이외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수수방관인 자세도 문제다.

이와 함께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개발도 대형 건설사가 발생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무관심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쓰러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건물 주변에서 노심초사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진다.

임택 정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 사고 속에 주민들을 방치시킨 것과 다름없다. 민선 8기 임택정장이 약속한 타이어들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지부진했던 '공·폐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묘안을 내놔야 할 때이다.